

2015 지방7급 행정학 기출문제 (2015.10.17 시행)

최근 지방직 7급 시험은 국회8급 시험과 함께 객관식 행정학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고 있다. 이번 시험도 적당한 난이도로 출제된 변별력 있는 문제였다고 본다. 평이하고 기본적인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었지만 깊이 있고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일부 문제가 출제되었다. 예컨대, 문1의 액션러닝 문제라든지 문 16의 매텔렌트의 정책집행모형, 문19의 탈코트 파슨스의 조직유형 등이 바로 그러한 문제에 해당한다. 7급 심화수업을 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고득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 김 중 규 -

01. 교육참가자들이 팀을 구성하여 실제 현안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지원하는 행동학습(learning by doing)으로서, 주로 관리자훈련에 사용되는 교육방식은?

- ① 멘토링(mentoring)
- ②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
- ③ 액션 러닝(action learning)
- ④ 워크아웃 프로그램(work-out program)

[답] ③ 액션러닝이란 정책현안에 대한 현장방문, 사례조사, 성찰미팅 등을 통해 훈련생이 실제 현장의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문제해결 및 참여자와 성과지향 교육훈련기법으로 최근 우리나라 등 각국의 고위공무원 교육훈련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 2016 7급 선행정학 p.514

02.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을 감한다.
- ② 강입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 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④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답] ② 강입이 아니라 강등에 해당한다. 강입은 징계가 아니며 정부조직개편으로 폐직 또는 파원이 되었거나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하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 2016 7급 선행정학 p.504

● 징계의 종류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6개월간 승급 정지
- 감봉 - 1~3월간 보수의 1/3을 감하는 처분으로 1년간 승급 정지
- 정직 - 1~3월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 를 감. 1년6월간 승급 정지
- 강등 - 1계급 하향조정(고위공무원단은 3급으로), 신분은 보유,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보수의 2/3를 감. 1년 6월간 승급 정지
- 해임 - 강제퇴직.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퇴직급여에 영향 X
- 파면 - 강제퇴직. 5년간 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의 1/4~1/2 지급 제한

☞ 2016 7급 선행정학 p.

03.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획예산제도(PPBS)는 계획(plan) - 사업(program) - 예산(budget)의 체계적 연계를 강조한다.
- ②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원칙적으로 정부사업과 예산항목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 ③ 목표관리예산제도(MBO)는 참여를 통해 설정한 세부사업의 목표를 예산 편성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 ④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는 주어진 자원 수준에서 달성한 산출물 수준을 성과 지표에 표시한다.

[답] ④ 품목별 예산제도는 산출이나 성과 중심의 예산이 아니다. ④는 품목별 예산이 아니라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에 해당한다.

☞ 2016 7급 선행정학 p.624

04.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에서는 본회의보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된다.
-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지만,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 ③ 예산안은 세출예산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의결된다.
- ④ 「국회법」에서는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 ① 우리나라는 예산심의회 본회의보다 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나머지는 모두 틀린 지문이다.

- ② [X]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신비목 설치나 금액증가를 시킬 수 없다.
- ③ [X] 우리나라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 의결의 형식이

므로 세출예산법안이 아니라 세출예산안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고 의결된다.

- ④ [X]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국회가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회법이나 국가재정법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2016 7급 선행정학 p.654

05. 「국가재정법」 상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 ④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의하여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할 수 있다.

- ☑ ① [O] 이용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② [O] 전용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④ [O] 명시이월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 2016 7급 선행정학 p.662

06.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② 공무원은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퇴직한 모든 공무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답] ③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에 규정되어 있다.

☞ 2016 7급 선행정학 p.559

0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보조금제도와 함께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에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 ② 지방교부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법정되어 있다.
- ③ 보통교부세는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한 일반재원이다.
- ④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비판도 있다.

[답] ② 지방교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조정재원(의존재원)이다.

- ☑ ① [O]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 ③ [O]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다.
- ④ [O] 특별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이므로 재정통제가 수반된다.

● 지방교부세

종류	개념	재원 ¹⁾	용도	교부주체
보통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행정부 장관
특별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	40/100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행정부 장관 & 국민안전처 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안전교부세 ²⁾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재원	국민안전처 장관
부동산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중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행정부 장관

☞ 2016 7급 선행정학 p.817

08.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결사체의 결성과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
- ②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에 따라 강조되었다.
- ③ 주요 속성으로는 상호신뢰, 호혜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있다.
- ④ 공동체 의식의 강화를 통하여 지식의 공유와 네트워크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답] ②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성원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신적 자본이므로 물질적·경제적 자원과는 무관하다.

☞ 2016 7급 선행정학 p.31

09.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성공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적 지식의 창출보다는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지식 축적을 강조한다.
- ② 개인 또는 부서가 업무결과로 얻은 새로운 지식을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 ③ 지식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조직구조를 정비한다.
- ④ 지식관리의 촉진제이자 실질적인 도구인 정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답] ① 지식관리시스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지식축적보다는 지식의 공유를 통한 조직적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식행정관리

구분	기존 행정관리	지식 행정관리
조직 구성원 능력	조직구성원의 기량과 경험의 일과성으로 소모	개인의 전문적 자질 향상
지식공유	조직 내 정보 및 지식의 분절, 과편화	공유를 통한 지식가치 향상 및 확대 재생산
지식소유	지식의 개인 사유화	지식의 조직 공동재산화
지식활용	정보·지식의 중복 활용	조직의 업무 능력 향상
조직성격	계층제적 조직	학습조직 기반 구축

☞ 2016 7급 선행정학 p.724

10.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제적 방법은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는 피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장래에 더 큰 저항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 ② 공리적·기술적 방법에는 개혁의 시기조정,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개혁이 가져오는 가치와 개인적 이득의 실증 등이 있다.
- ③ 규범적·사회적 방법에는 개혁지도자의 신망 개선, 의사전달과 참여의 원활화, 사명감 고취

와 자존적 욕구의 충족 등이 있다.

- ④ 저항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리적·기술적 방법이다.

[답] ④ 개혁에 대한 저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리적·기술적 전략이 아니라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극복전략

① 규범적·사회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의 확대 · 의사소통의 촉진 ·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 카리스마나 상징의 활용 · 충분한 시간 부여
② 공리적·기술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의 점진적 추진 ·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 강조 · 개혁방법·기술의 수정 · 적절한 인사배치·호혜적 전략 ·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의 명확화
③ 강제적·물리적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적인 긴장 조성 · 물리적 제재나 압력 사용 · 상급자의 권력 행사

☞ 2016 7급 선행정학 p.710

11. 신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논리실증주의에 대한 지지
ㄴ. 사회적 형평성의 추구
ㄷ. 현실 적합성의 추구
ㄹ. 참여의 강조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답] ④ 신행정학은 1960년대 말 미국사회의 격동기 때 발생한 절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실적합성과 실천성, 참여를 통한 형평성의 추구를 중시했던 이론이다. 행태론의 논리실증주의에 대해서는 과학적 지식을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 신행정학의 특징

· 사회적 형평 등 행정의 새로운 가치 중시 - 가치주의, 인본주의 행정학
· 격동기의 대응과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 및 적극적 가치관 중시 - '관조'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의 '실천'하는 적극적 행정인 중시, 적실(relevance)과 실천(action) 강조
· 정책 및 문제지향성 - 정치행정신일원론
· 행태론의 지양과 현상학적 접근법 추구 - 간주관성 및 능동적, 사회적 자아 중시
· 과학적 방법을 포기(배격)한 것은 아님 - 과학적 지식을 문제해결에 활용할 것을 주장
· 사회적 적실성·기술성(치방성)·대응성 강조
· 후기관료제모형 - 계층제의 타파로 민주적·동태적·도덕적·분권적·다원적 조직 주장
· 고개지향적 행정과 민주적 행정 모형 강조 - 수익자의 참여와 소의계층에 대한 배려

☞ 2016 7급 선행정학 p.137

12. 공익(public dishonest)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체설은 사회 구성원 간에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보다는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을 공익으로 보는 입장이다.
- ② 실체설에서 인식하는 공익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도덕적 절대 가치, 정의, 공동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등으로 다양하다.
- ③ 과정설에는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가진 집단들 사이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 있다.
- ④ 과정설에는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

[답] ① 공익의 실체설은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동체나 사회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의 이익을 중시한다.

● 공익의 실체설과 과정설

실체설	과정설
적극설	소극설
전체주의	개인주의
선형적	경험적
공익 ≠ 사익의 합	공익 = 사익의 합
합리모형	점증모형
개도국	선진국
권위주의	다원주의
Plato, Aristoteles 등	Sorauf, Hume, Hobbes 등

☞ 2016 7급 선행정학 p.83

13.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반면 정책공동체는 개방적이고 유동적이다.
- ② 헤클로(Hecllo)는 하위정부모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이슈네트워크모형을 제한했다.
- ③ 많은 학자들은 1960년대에 등장한 하위정부모형이나 1970년대에 등장한 이슈네트워크모형이 정책네트워크모형의 기원이라고 본다.
- ④ 정책공동체의 경우, 모든 참여자가 자원을 가지며 참여자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는 교환관계이다.

[답] ① 로즈와 마쉬(Rhodes & Marsh)에 따르면 이슈네트워크는 개방적·유동적이지만 정책공동체는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된 공동체이므로 비교적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네트워크이다.

- ☑ ② [O] 이슈네트워크 모형은 1970년대 헤클로가 철의 삼각모형(하위정부모형)을 비판하며 제시한 개념이다.
- ③ [O] 정책네트워크 모형은 하위정부(철의 삼각) ⇨ 이슈공동체 ⇨ 정책공동체 순으로 발달하였

다.

- ④ [O] 정책공동체는 모든 구성원이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이를 교환하는 권력균형관계이다.

● 정책네트워크의 종류

	철의 삼각	이슈공동체	정책공동체
행위자	관료+이익집단+의회상임위원회	광범위한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제한된 참여 (관료+전문가)
폐쇄성	폐쇄적	개방적	비교적 폐쇄적
안정성	안정적	불안정 (유동적, 일시적)	비교적 안정적 (지속적)
행위자간관계	동맹관계	경쟁적, 갈등적 (negative-sum game : 영합게임)	의존적, 협력적 (positive-sum game : 정합게임)
정책	분야별 정책지배	정책산출 예측곤란	의도한 정책산출 예측 가능

☞ 2016 7급 선행정학 p.204

14.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일반대중의 관심과 주의를 받고 있으며,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인정되지만, 정부가 문제 해결을 고려하기로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 ① 사회문제(social problem)
- ② 사회적 쟁점(social issue)
- ③ 공중의제(public agenda) 또는 체제의제(system agenda)
- ④ 정부의제(governmental agenda) 또는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답] ③ 제시문은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의 개념에 해당한다.

● 정책의제의 유형

Cobb	특징	Eyestone	Anderson
체제의제	국민이 정부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 관심사,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갈등이 높은 포괄적인 환경의제, 채택 전 의제	공중의제	토의의제
제도의제	정책결정자가 직접 검토하고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 의제, 정부의제, 채택된 의제	공식의제	행동의제

☞ 2016 7급 선행정학 p.194

15.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윌슨(Wilson)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응집력이 강한 소수의 편익수혜자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허용한다.
-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답] ② ②는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가 해당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시스템이고, 네거티브 규제는 반대로 '원칙 금지·예외 허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금지시키는 규제시스템이다.

☑ ③ [O] 옳은 지문이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2016 7급 선행정학 p.50

16. 매틀랜드(Matlang)가 모호성(ambiguity)과 갈등(conflict)이라는 두 차원에 따라 분류한 네 가지 정책집행상황 중에서,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갈등은 매수(side payment)나 담합(logrolling)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기도 한다.
- ②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중요해진다.
- ③ 정책집행과정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다.
- ④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은 목표의 해석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답] ④ 모호성이 낮고 갈등이 높은 집행상황은 정치적 집행에 해당한다. 정치적 집행이란 정책목표가 명확한 상태에서 저서 갈등이 높기 때문에 매수나 담합, 날치기 통과 등이 나타나며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또는 보상적 수단이 동원되기도 한다. 정책집행과정은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행조직 외부의 행위자에 의하여 영향을 많이 받는다. ④는 모호성도 높고 갈등도 높은 집행상태인 상징적 집행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 Matland의 정책집행통합모형

(1) 의의 : Matland(1995)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를

찾는 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양 접근방법이 어떠한 조건하에서 더 잘 적용되는지, 이 때 중요해지는 집행변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구분	갈등		
		낮음	높음
정책목표의 모호성	낮음	관리적 집행	정치적 집행
	높음	실험적 집행	상징적 집행

- ① 관리적 집행 : 프로그램화된 결정(SOP)이 나타나고, 하향적 접근이 가능한 모형이다.
- ② 정치적 집행 : 매수, 담합, 날치기 통과 등이 나타난다.
- ③ 실험적 집행 : 정책을 학습으로 보며 정책결과는 맥락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 ④ 상징적 집행 : 집행과정은 목표와 수단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보고, 여기에는 참여자에 대한 직업적인 훈련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상향적 접근이 유용한 모형이다.

(2) 평가 : 어떤 논리적 근거로 모호성과 갈등이라는 변수가 선정되었는지 불분명하다.

☞ 2016 7급 선행정학 p.274

17. 바스(Bass)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더는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 ② 리더는 성과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관리방식을 활용한다.
- ③ 리더는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을 자극하고 변화를 유도한다.
- ④ 리더는 조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답] ②는 변혁적 리더십이 아니라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한다.

- ☑ ① [O] 개별적 배려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에 해당한다.
- ③ [O] 지적자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요소에 해당한다.
- ④ [O] 영감적 리더십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에 해당한다.

●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리스마적(위광적) 리더십 - 도덕적 수범, 신뢰, 존경, 리더와의 헌신과 일체감 ㉡ 영감적 리더십 - 도전적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공유 ㉢ 지적 자극 - 관행타파 및 새로운 관념 촉발 ㉣ 개별적 배려 - 개개인의 특성 고려

☞ 2016 7급 선행정학 p.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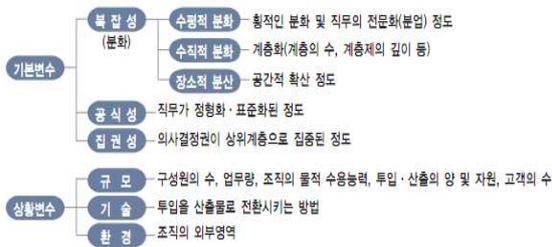
18. 조직의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잡성은 조직의 분화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에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을 수직적 분

- 화라고 한다.
- ② 공간적 분화는 조직의 시설과 구성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③ 공식화는 일반적으로 업무수행 방식에 대한 공식적 규정의 수준을 의미한다.
 - ④ 집권화는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고위층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답] ① 복잡성이란 조직의 분화의 정도를 의미하며 단위 부서 간의 업무를 세분화하는 것은 수평적 분화, 상하계층 간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은 수직적 분화라고 한다.

● 조직의 구조변수



☞ 2016 7급 선행정학 p.366

19. 파슨스(Parsons)가 제시한 사회적 기능, 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유형, 그리고 각 조직유형별 예시를 모두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적응(adaptation) 기능 - 교육조직 - 학교
- ② 목표 달성(goal attainment) 기능 - 정치조직 - 행정기관
- ③ 통합(integration) 기능 - 통합조직 - 종교단체
- ④ 잠재적 형상유지(latent pattern maintenance) 기능 - 경제조직 - 민간기업

[답] ② T.Parsons는 체제의 4대기능을 중심으로 조직을 4가지로 유형화하였는데 옳게 연결된 것은 ②번이다.

- ☑ ① [X] 적응기능이 아니라 형상유지기능이다.
 ③ [X] 종교단체가 아니라 경찰·사법기관이다.
 ④ [X] 잠재적 형상유지기능이 아니라 경제적 기능이다.

● T.Parsons의 조직유형

기능	적응기능	목표달성기능	통합기능	형상유지기능
조직	경제적 조직	정치조직	통합조직	형상유지조직
예	회사 등 사기업체	정당, 행정기관	경찰, 사법기관	교회, 학교

☞ 2016 7급 선행정학 p.316

20. 근무성적평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표식 평정척도법(graphic rating scale)에서는 연쇄효과(halo effect)가 나타나기 쉽다.
- ② 대인비교법(man-to-man comparison)은 평정기준으로 구체적인 인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평정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다.
- ③ 산출기록법(production records)은 일정한 시간당 달성한 작업량과 같이 객관적 사실에 기초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 ④ 체크리스트법(check list)은 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들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술하게 하는 방법이다.

[답] ④ 체크리스트법이 아니라 중요사건기록법에 해당한다. 체크리스트법은 평정서에 나열된 평정요소에 대한 설명이나 질문을 보고 평정자가 피평정자에 대해 해당하는 사실표지항목을 골라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 근무성적평정방법

평정방법	개념	단점
산출기록법	일정 기간 생산고(근무실적)를 수량적으로 평가	
주기검사법	주기적으로 특정 시기의 생산 기록 측정	
도표식평정척도법	가장 많이 이용되며 한편에는 실적·능력 등의 평정요소를, 다른 한편에는 우열을 표시	등급 간에 기준 모호, 연쇄효과
강제선택법(체크리스트법)	4~5개의 체크리스트 단문 중 강제 선택	평정항목 작성 곤란 및 항목이 많을 경우 혼란
강제배분법	집단적 서열법으로 우열의 등급에 따라 구분한 뒤 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배치	역산식 평정 가능성
중요사건기록법	근무실적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건들을 평정	이해적 행동 강조 위험
행태기준척도법	평정의 임의성·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건기록법을 가미	
행태관찰척도법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식평정척도법	도표식 척도법의 한계
목표관리법	근무과정이나 태도보다는 결과 중심의 평정	
평정주체별		
감독자 평정	상급자가 평정하는 전통적 방법. 수직적 계층구조가 강한 기계적 구조에 적합	
다면(집단)평정	감독자뿐 아니라 부하, 동료, 민원인까지를 평정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 (전방위평정)	

☞ 2016 7급 선행정학 p.516